

# 소재·부품·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

## 1 기업 선정 방안

### < 기본 방향 >

- ◆ **(선정기준)**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핵심전략기술 분야  
기본역량 + 향후 중장기 성장전략을 종합고려
  - ◆ **(선정방식)** 공개모집 →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4단계 종합평가  
(서면·현장·대면·종합평가 + 온라인공청회)
- ⇒ 이를 통해 ①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,  
②적극적·진취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을 선정

### 가. 선정기준

#### ① 기본역량

- ① 핵심전략기술 관련 보유역량  
(연구개발비 비중, 지식재산권, 연구인력, 투자유치)
- ② 핵심전략기술 관련성·중요도·기술수준
- ③ 소부장 매출 비중

#### ② 성장전략

- ① 기술혁신 전략
- ② 사업화·투자 전략
- ③ 글로벌 진출 전략

- ※ 특별법 제13조(특화선도기업의 선정) 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를 종합 고려하여 선정
1. 총 매출액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 및 총 매출액중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비중,
  2.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연구인력 보유현황, 3.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
 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기술경쟁력, 경영 및 재무상황,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)

#### ① **(기본역량)** 국내에 연구개발·생산 기반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,

- ① 핵심전략기술 분야 ①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(3%), ②지재권(5건),  
③전문연구인력(4인), ④투자유치(3억원) 등을 종합 평가(2개 이상은 반드시 충족)

\* 산업부 추경 R&D 참여기업 데이터, 중소기업기술통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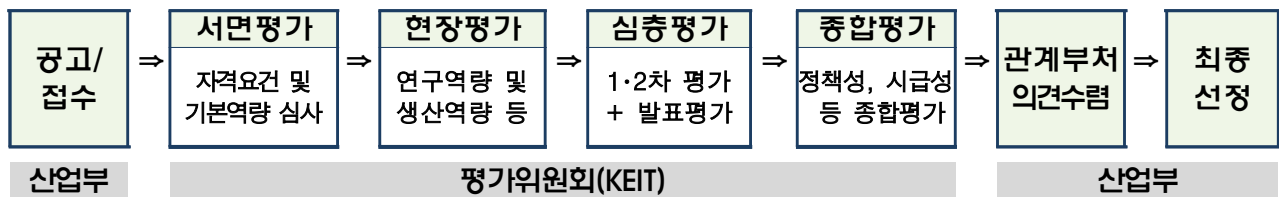
- ②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핵심전략기술 관련성, 중요도·난이도, 세계 최고 기술 대비 기술수준 등을 평가
- ③ 소부장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자격을 개방하되, 소부장 매출비중이 높을수록 우대

※ 단, 부도·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 및 가능성이 높은 기업, 공정거래위반·임금체불 등 위법행위 기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

- ② **(성장전략)** 현재 기업이 보유한 성장 기반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성장 전략에 대해 목표의 적극성, 전략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

전략	평가내용
①기술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, 보유 기술·인프라 수준 등</li> <li>▸ (전략) 핵심전략기술 분석 충실도, 자체/외부 기술확보 전략 구체성 등</li> </ul>
②사업화·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최근 3년간 투자실적, 투자실적 대비 효과, 영업이익률 등</li> <li>▸ (전략) CEO 의지, 구체적 투자계획, 자금 자체/외부조달 방안 등</li> </ul>
③글로벌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▸ (기반) 주요 품목 시장점유율, 수출처 현황, 해외진출 기반 등</li> <li>▸ (전략) 글로벌 시장 진출 시기, 규모 등 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등</li> </ul>

## 나. 선정절차



- ① **(공고)** 인터넷 공고(30일)를 통해 신청 기업이 ‘글로벌 전략계획서’ 제출\*
  - ② **(1차: 서면평가)** 전담기관(KEIT)이 기본자격요건 등 先검토하고,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기본역량+성장전략 서면평가(2배수內)
  - ③ **(2차: 현장평가)** 6대 분야별 현장실사단 구성하여 신청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역량 검증, 증빙서류 사실여부 등 확인(1.5배수 내외)
  - ④ **(3차: 심층평가)** 기술, 사업화,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(6개 분과별 10인내외)하여 기업 공개발표를 토대로 심층평가(1.2배수)
    - ‘사전평가 30%’\* + ‘발표평가 70%’을 종합하여 득점 우선순위로 특화선도기업 후보군 선정(1.2배수 내외)
- \* 1차 서면평가, 2차 현장평가 결과, 국내외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검토
- ※ **국내외 온라인 공청회** : 국내외에 소부장 전문가를 모집하여 기업평가

  - (국내) 수요기업, 정부출연연구소, 대학 등 200명 내외
  - (국외) 재외한인과학자, 유관기관 해외파견 연구소 등 100명 내외
- ⑤ **(4차: 종합평가)** 6대 분야별 특화선도기업 후보군에 대해 정책성, 시급성, 전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 선정(1배수)
  - ⑥ **(최종선정)** 종합평가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산업부가 최종 확정

#### < 기본 방향 >

- ◆ 특화선도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존 정부 지원책으로 부족하거나 지원이 곤란한 영역은 전용사업 신설하여 파격적이고 강력하게 지원

\* 특별법 16조(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) 발전전략수립, 재정·금융 지원, 연구개발·인력 양성·기반조성 지원, 분야별 전문가 파견, 특허 등 정보제공, 해외진출전략 지도·자문 등

- 다만, 정부의 직접적 자금·세제지원은 특화선도기업 지정기간(5년) 동안 한시적으로 중견·중소 기업 중심으로 지원(R&D는 대·중견·중소 모두 지원)

#### < 주요 신설 전용사업 >

	기존 정부지원책		신설 전용사업
기술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R&amp;D프로그램 별 제도적 제약</li> <li>→ 기업 수요를 100% 반영 곤란</li> <li>→ 리스크가 큰 분야는 R&amp;D 기피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율방식 대형 R&amp;D</li> <li>▶ 기업 민간 부담금 완화</li> </ul>
사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중소/벤처기업 위주 자금 지원</li> <li>→ 민간투자금 쏠림 현상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중견·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융자, 펀드 우선지원</li> </ul>
글로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해외 현지 기반, 정보, 네트워크 부족</li> <li>→ 해외진출·M&amp;A 소극적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현지 거점 구축 지원, M&amp;A 컨설팅, 온라인 마케팅 강화</li> </ul>
규제 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기업의 단발성 규제 대응</li> <li>→ 규제대응 부담 및 해결 어려움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규제 하이패스 지원(신속·간단·일원화된 규제 서비스)</li> </ul>
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개별 기업의 자체 홍보 중심</li> <li>→ 소부장 기업 특성상 인지도 低</li> </ul>	⇒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 지원</li> </ul>

\*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모 확정

- ◆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함으로써 별도 프로그램 신설없이 범부처 종합 맞춤형 지원

- 또한, 특화선도기업 선정 이후에도 정부 지원책 지속 발굴 및 지원

- ◆ “특화선도기업(법률 명칭)”의 브랜드파워 형성을 위해 고유명칭 선정 추진

## 가. 파격적인 전용 프로그램 신설

### ① (기술혁신) 특화선도기업 기술개발 우선지원 및 공공기관 인프라 전폭 지원

#### ① (R&D)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자율 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(기업당 최대 50억원/년)

\* 기업규모,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

- 특화선도기업이 원하는 기간, 방식, 컨소시엄\*으로 사업기획 및 R&D 추진하되, 과제 중복 여부 등은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

\* 국내/해외 수요기업과 공동 R&D, 국내 협력업체와의 공동 R&D 등

- 기술격차가 큰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추진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

\* (소부장특별법 제60조)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또는 공급기업과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

-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·중견기업 (現) 각 67%, 50% → (改) 35% 이상, 중소기업은 (現) 33% → (改) 20%이상으로 완화, 현금 부담비중은 모두 10%로 이상으로 완화

#### < 민간 부담비율 변경(안) >

기업유형	민간부담금		현금부담비중	
	현행	변경	현행	변경
대기업	67%이상	35%이상	60%	10%이상
중견기업	50%이상		50%	
중소기업	33%이상	20%이상	40%	

#### ② (공공인프라) 융합혁신지원단\*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, 기술자문, 인력파견, 장비지원 등 최우선 지원

\* 출연연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(12개 출연연 + 20개 전문연)

- 아울러, 출연연 원천기술 개발 시 특화선도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기술개발 추진

### ② (사업화)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사업화 위험도가 높고 투자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

- ① (융자)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(산·기은), 환경·안전투자지원자금(산·기은) 등을 통해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\*

\* 금리우대(중소  $\Delta 0.7\%p$ , 중견  $\Delta 0.6\%p$ ), 전결권 하향 등

- ② (펀드) 소부장 성장지원펀드(4,000억원)를 활용하여 중소·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&A, 설비투자 우선지원

- ③ (세제) 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(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신설 추진)

- ④ (상장특례) 비상장 특화선도기업이 원하는 경우, 기술특례상장 허용

### ③ (글로벌화) 해외 수요기업과의 유무형 네트워크 강화

- ① (GVC 거점 구축) 마케팅, AS 등을 위해 컨설팅, 현지 착근형 인프라 구축 등 우선지원\*, 추후 거점 확대시 특화선도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

\* 해외 GP 센터 활용(코트라, 7개소), 화상상담, 수출인큐베이터(중진공) 등

- ② (M&A 지원) 투자 기반의 다양한 기술거래(M&A, 소수지분투자, 합작, 기술이전 등)를 지원

- 국내외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를 조사·발굴하고,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투자계약 체결 유도

- ③ (온라인 마케팅) MD협회 등 마케팅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 B2B 사이트(E-bay, 알리바바 등)에 특화선도기업 제품 홍보

- 아울러, 해외시장정보를 특화선도기업에게 제공하고, 기업별 On-line 마케팅 전략 컨설팅 지원

④ **(규제특례)** 특화선도기업 “규제 하이패스 제도”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

- ① **(창구 일원화)** 특화선도기업의 규제애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창구 일원화하여 애로접수, 부처협의 및 활용 가능한 컨설팅 사업\* 등 안내

\* (환경부) 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 지원, (산업부) 환경규제 대응 애로 맞춤형 기업지원 등

- ② **(신속처리)** 수급대응센터에 접수된 애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개선 여부를 회신토록하고, 개선 가능한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

- 특히, 화평·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

- ③ **(제도개선)** 모든 규제 애로사항은 경쟁력委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\*에서 검토하여 유사·중복 규제여부, 과도한 규제 여부 검토

\* 환경, 노동, 세제 등 산학연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('19.10월~)

-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부처에 중점검토를 요청하고 경쟁력위원회를 거쳐 개선 추진

⑤ **(국가 브랜드화)** 국가 차원에서 특화선도기업을 우리나라 대표 소부장 기업으로 적극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화 추진

- ① 법률상 명칭인 “특화선도기업”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 
△ 고유 명칭 선정\*, △ 고유 마크 제작\*, △ 홍보대사 위촉

\* 기업선정 공고 및 신청 접수 시, 고유 명칭·마크에 대해 의견수렴하여 최종 결정

- ② 정부가 기획기사, TV방송,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특화선도기업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

\* 소부장 기업은 대부분 B2B 기업으로 일반 국민으로부터 인지도가 低

- ③ 우수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훈·포장 수여 및 성과 사례홍보 등 기업의 자긍심고취 및 대내외 인지도 제고 환경 조성



## 나. 범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

- **(지원내역)** R&D, 인력, 자금, 투자 등 관계 부처가 운영중인 100여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범부처 협업하에 특화선도기업에 종합지원

주요 지원 프로그램			
기획 ▶ 기술개발 ▶ 실증 ▶ 생산 ▶ 판로 등 사업화 전주기 지원			
<b>R&amp;D 등 정부출연</b>	<b>발전전략 수립</b> ▶ 기업성장전략 컨설팅 ▶ 수요-공급기업 공동로드맵 등	<b>기술개발</b> ▶ 소부장 R&D, IP R&D, 국제공동 등 ▶ 지역혁신 LAB 인력양성 등	<b>실증·양산</b> ▶ 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▶ 신뢰성·양산평가, 보증 등
<b>금융·투자·세제</b>	<b>융자·대출</b> ▶ 시설투자, 운영자금 ▶ 수출자금 융자	<b>투자·M&amp;A</b> ▶ 투자펀드, 정책금융 ▶ 국내외 M&A 정보제공, 알선·중개, 자금지원, 기술 상용화 등)	<b>세제</b> ▶ R&D·시설투자/M&A 등 세액공제, 해외전문인력 소득공제 등
<b>공공 인프라</b>	<b>출연연 기술·인력·장비</b> ▶ 출연연 보유 기술, 인력, 장비 기업 이전·사용	<b>인증·표준화</b> ▶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▶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	<b>수출·판로</b> ▶ 수출바우처, 해외마케팅, 전시회 등
<b>규제 등 애로해소</b>	<b>인허가</b> ▶ 환경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▶ 지자체 등 규제 즉결처리	<b>각종 특례</b> ▶ 특별연장근로 인가, 장비도입절차 간소화, 청년의무고용 예외 등	<b>입지</b> ▶ 특화단지 지정, 수도권 산단 물량 우선배정, 임대전용산단 우선 입주

- **(방식)** 기업-전담기관-산업부-관계부처간 협업하에 메뉴판식 종합지원

- (1단계) 기업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5년간의 종합전략 및 연간 사업계획 수립 → 메뉴판에서 필요한 정부 지원책 선택\*

\* 전담기관은 기업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

- (2단계) 산업부-관계부처-전담기관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 확정



## 다. 성과 모니터링 및 컨설팅

- **(기업성장 지원)** 전략계획서에 따라 연 단위 성장목표 설정 → 기업 성장 현황 점검(연 2회) → 목표 미달성 기업은 집중 컨설팅
  - 전담기관의 담당자 지정하여 5년간 밀착지원하고 기업의 매출, 고용,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성과 데이터를 DB화하여 맞춤형 성장전략 컨설팅
  - 선정 후 3년차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기업 성장상황을 점검하고, 5년차 최종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여부를 종합평가
    - \* 중간평가 미흡 기업은 선정 취소, 종합평가 우수사례는 홍보
  - 당초 전략계획서 대비 대규모 사업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와 사업조정 협의, 담합·불공정 거래 등 부당 행위시 특화선도기업 취소 가능
- **(소통 지원)** 선정된 기업간 “특화선도기업 협의체”를 구성하여 기업간 교류와 소통 및 對정부 정책건의 창구로 활용
  - 또한, 특화선도기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부 시행 정책 정보 제공, 수요기업 및 일반인 대상 기업 채용정보, 제품정보 등 제공

## 4 향후 일정

### □ [선정] '20.5월~3/4분기, 제1차 기업 선정 프로세스 진행

기업 간담회 등 (~'20.4월)	선정공고 (20.5월)	선정평가 (20.5~7월)	최종확정 (20.3/4분기)
의견수렴	사업공고(30일)	서면→현장→ 심층→종합	산업부

\* '21년까지 3~4차례 특화선도기업 추가 선정 추진

### □ [출범식] '20. 3/4분기, 특화선도기업 출범식

- \* ①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수여, 홍보대사 위촉,
- ② 국내외 글로벌 수요·공급 기업 초청, 성장 전략 공유



# 소재·부품·장비 협력사업

## □ 협력사업 개요

- 국내수요 확대 ⇔ 공급 품질개선 이라는 선순환 도출로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안정성 강화 도모
- 경쟁력강화위원회(위원장: 경제부총리)에 상정, 승인된 협력사업(경쟁력 강화계획서)에 대해 정책 패키지 지원

\* 제2차 위원회('19.11)에서 협력사업 4개 최초 승인 ⇒ '20년부터 격월로 개최 중

## □ 협력모델 유형
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내 수요-공급 기업간 수직적 협력, 수요-수요 기업 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 구축 가능

### < 주요 협력모델 유형 >

<b>수직적 협력</b> (수요-공급기업 간)	<b>① 협동 연구개발형</b> (기술로드맵 공유 R&D→기술활용 R&D)	<b>② 공급망 연계형</b> (양산평가시험 개방, 공동기반 구축 등)
<b>수평적 협력</b> (수요기업 간)	<b>③ 공동 투자형</b> (공동 개발·시설투자)	<b>④ 공동 재고확보형</b> (공동구매, 보관)

- 특히, 기술력·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견 기업의 주도의 협력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파급효과 확산 가능

## □ 패키지 지원

구 분	주요 내용
R&D	· 예산사업, 기술지원(지재권 확보, 실증인프라 활용 등)
세제·자금	· R&D, 시설투자, 해외 M&A 등 세액공제, 관세 세정 지원 등 · 정책자금 프로그램, 공동 M&A 인수자금, 보증프로그램 지원 등
기업지원	· 컨설팅, 정보제공, 해외인증 등 종합 지원
인력	·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, 출연연·과기원 등 전문인력·기업네트워크 활용 등
규제특례	· 환경, 노동, 입지 등 특례 지원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처리 등